“무기계약직으로 바꿔달라” ‘뇌물 사슬’ 까지

‘현대판 음서제’ 전락
무기 계약직 공무원

광양시 4000만원 돈 거래
금품수수 공직비리 온상

보성군 올 초 17명 뽑아
일부 선거 보은 의혹 주장

‘논공행상’ 대상 변질

▶1면에서 계속

전남 시·군의 무기계약직 채용 관련 비리도 잇따라 불거져 큰 사회문제로 지적됐다.

광양시의 경우 지난 2010년 당시 총무과 8급 공무원이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지난해 말 드러나면서 비정규직 노조가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관련자 5명의 구속·불구속 기소로 이어진 것이다.

비리의 발단은 기간제 2명이 해당 직원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바꿔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건넨 것이다. 4000만원은 당시 고위공무원인 전직 4급 국장에게 전해졌고, 이 고위공무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1500만원을 갖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간제는 공교롭게도 시장 당선 이후 무기계약직이 됐다.

당시 수사를 맡은 광양경찰 관계자는 “선거 캠프 관계자에 전달됐다고 하는데 실제 윗선까지 보고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며 “민간인 신분인 선거 캠프 관계자도 기소됐다”고 말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신분 상승’에 거액의 금품, 뇌물, 선거 등이 조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광양시의 기간제는 2014년 6·4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13년 219명에서 2014년 325명, 올해 333명으로 2년새 무려 114명이 급증했다. 거기에 무기계약직 역시 2013년 170명에서 2015년 190명으로 20명이 많아졌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청원경찰이다. 청원경찰은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18명이었으나 올해 갑자기 6명을 추가 선발한 것이다.

6명 채용에 70명이 몰려 12대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시장 측근 인척이나 자녀가 대거 포함돼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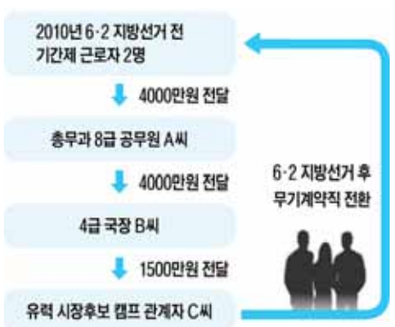
보성군도 무기계약직을 17명이나 올 초 신규 채용해 논란이 일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선출 고위직을 도왔던 인사들의 친인척과 자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성군의 경우 지난 2010년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70명과 142명이었는데, 6년 후인 올해 90명과 184명으로 각각 20명과 42명이 늘었다. 행정자치부가 이후 감사에 착수했으나 보성군은 기관경고를 받았을 뿐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기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지 않고 무기계약직을 신규 채용한 사실 때문에 감사를 받은 것”이라며 “(고위직 관련자라는) 소문은 돌았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자살예방 ‘빛고을생명지구대’ 출범 광주시민의 자살예방 활동에 앞장 설 ‘빛고을생명지구대’의 출범식이 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렸다. 시민과 공무원 등 300여명의 대원들이 생명사랑 활동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선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양시 무기계약직 전환 비리 사건 개요〈왼쪽〉와 전남도가 최근 무안군 감사를 통해 밝혀낸 특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명단.

여수 웅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신청

전국 6곳…해수부 평가 돌입

해양수산부는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모 결과 여수시 등 6곳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평가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마리나는 요트 등 레저 선박의 계류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식당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갖춘 항구다.

해수부는 과거에 인천 덕적도, 전북 고군산, 전남 여수엑스포, 경남 창원 명동, 울산 진하, 경북 울진군 후포 등 6곳에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업비 등을 이유로 5곳의 지자체 등에서 손사래를 쳐 최근에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 협약만 울진군과 체결했다.

이에 해수부는 작년 말부터 추가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신청을 접수했다. 그 결과 여수 웅천마리나항만, 부산 영도구 하버마리나항만, 부산 해운대구 운촌마리나항만, 경남 창원 명동마리나항만, 경기 안산 방아머리마리나항만, 충남 당진 당진마리나항만 등 6곳이 신청서를 냈다.

이 가운데 부산과 창원은 민간 사업자이고 여수·안산·당진은 지자체가 신청했다.

해수부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위치여건 등을 평가해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에는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몇 곳을 선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자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방파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1곳당 300억원 이내 국비를 지원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고을 중추도시생활권’ 광주시·5개 자치구, 인근 5개 시·군

행정협의회 구성·신규 협력과제 15건 발굴

오늘 단체장 11명 간담회
공동발전·상생 모델 논의

‘빛고을중추도시생활권’으로 묶여있는 광주·전남지역 11개 자치단체장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 주재로 2일 광주 시내 모 음식점에서 5개 자치구 구청장과 인접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등 5개 시·군 단체장이 모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빛고을중추도시생활권 단체장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광주시와 5개 구청, 인접 5개 시·군 등 11개 단체장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해 해당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마련한 후 각 자치단체별로 의회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협의회를 발족시키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개최할 방침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첫 모임에서 논의된 장사시설 공동 확충과 이용료 조정, 지역 농식품 로컬푸드 체계구축사업,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협력, 아트투어 남행열차 등 7개 협력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15건의 신규 발굴 사업을 협력과제로 확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나주시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승촌보와 영산강문화관 일원을 대상으로 ‘승촌보 주변 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을 위한 ‘다정다감 남도여행’, ‘빛가람 문화예술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담양군과는 가사문화권 등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남도 향기가 있는 광역시티 투어’와 ‘가사 문화권 누정 체험프로그램 추진’, ‘담뿍 아리랑 한류 빛고을 특구 조성’ 등을 협력 추진한다.

화순군과는 ‘화순백신특구와 광주연구개발특구의 확대 지정’,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건설’, ‘옛 너릿재 구간 광역자전거길 구축’사업을, 함평군과는 광주송정떡갈비와 함평 한우비빔밥거리 등 대표음식 거리를 활용한 ‘맛 관광 팸투어 상품 개발’, ‘명품체험마을 연계협력 관광활성화’사업, ‘동구 충장축제와 함평 나비축제 상호 교류협력’ 등을 진행한다.

장성군과는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건설’, ‘광주·장성 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 ‘소통의 꽃길 및 창조의 공원 조성’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과제는 5개 자치구와 인접 시·군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16명과 시·구·군 관계 공무원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된 ‘빛고을 중추도시생활권 발전 프로젝트 수립 TF팀’의 분과회의 등을 거쳐· 발굴된 과제로, 시 관련부서와 자치구, 인접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와 인접한 전남 5개 시·군은 역사 문화적으로 한 뿌리로, 상호간 세심한 배려와 신뢰 속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